

여러 부처 손잡고 일하니 그 열매는 국민에게 한아름



일러스트·이철원

국민 중심,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부처 간 협업이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에서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2013년 부처 간 협업 과제 173개를 선정해 67개를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재정비해 현재 79개를 추진 중이다.

협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업 인식수준 조사(2013.12) 결과 응답자의 82퍼센트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협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 사례들을 소개한다.

주거지원 덕에 취업했어요



한소현
직장인

2013년 3월부터 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주거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 이전에 살다가 2011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남매의 장녀라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했는데, 나머지 생활비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장 집이 문제였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 처음에는 남양주에 계시는 이모집에서 통학했지만 멀고 불편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많은 홍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세로만 월 45만원이 들고 학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릴 정도로 거리도 멀었습니다. 매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방세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로 달려가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룸이 으스스한 골목 안에 위치한 터라 밤마다 들어가는 길이 항상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대화 중에 정부에서 대학생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LH공사가 협업해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지금은 학교 근처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에서는 5분 거리, 학교에서는 10분 거리입니다. 경비시스템도 잘 돼 있고 16.5평방미터 남짓한 방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구비된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

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전세자금 7천만원의 이자 형태로 매달 11만5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6만~7만원 정도로 한 달에 20만원 내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지내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취업도 잘돼 지난 5월부터 은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취업을 했지만 다행히 전세임대 계약은 2년이라 2015년 3월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올해 부처 협업으로 캠퍼스 밖 공공기숙사들도 속속 생겨난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대학생의 40만명까지 주거지원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모교에는 기숙사가 없어 주거에 불편함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통학하기에 먼 친구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무엇보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위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나 생활비 문제로 학업이나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G** (관련기사 18쪽)

친구와 대화 중에 정부에서 대학생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부부처와 LH공사가 협업해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깨끗하고 값싼 전세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통학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충남 서산 고용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1 서산고용복지센터에서 분야별 담당자들이 구직자 등 시민들과 상담하고 있다.
 2 서산고용복지센터에는 문화공간이 마련돼 구직자들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고용·복지는 기본... 문화공간도 제공해요

서산고용복지센터, 문화 결합 첫 확장형 센터... 민·관협업 모델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 7월 '고용복지센터'를 열고 9월 18일 정식 개소식을 가졌다. 1,311평방미터 규모로 직원 수는 37명이다. 서산 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의 고용과 자활 전반을 돕는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건물 6층에 문화공간까지 갖춰 구직자들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이희광 주무관은 "기준에 있던 다른 지자체의 고용복지센터가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 센터는 여기에 문화를 결합한 최초의 확장형 센터"라며 "일자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여건상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센터 문화공간을 통해 혜택을 드리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직 고통 잠시 잊고... "현악기·회화 즐기는 동호회 생겼죠"

실제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동호회가 개설되면서 문화공간만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첼로나 기타 등 현악기 연주를 함께 연습하는 동호회에서부터 회화를 그리는 동호회까지 다양하다. 곳곳에 마련된 연습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로이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구직상담부터 문화공간 이용까지 가능한 통합형 서비스다.

물론 고용과 복지라는 센터 고유의 기능에도 충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협업해 올해부터 전국 각지에 설립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따뜻한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던 사람들은 막상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어디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어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일수록 정보력이 부족해 자신이 받아야 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고용복지센터는 이런 애로점을 개선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가까운 센터를 찾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고용과 복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센터에서는 문화공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다.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시에 처음 고용복지센터가 마련된 이후 부산 북부, 경북 구미, 충남 천안과 서산 등지에서 차례로 문을 열었다.

협업 발전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

여러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강화한 '정부3.0' 사례로도 주목할 만하다. 구자창 서산고용복지센터장은 "지역의 고용·복지 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일자리정보 제공과 복지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민의 문화생활 기회까지 편리하게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당당히 고용과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용률 제고 방안을 끊임없이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었

다. 고용부 등 협업부처는 9월 18일 서산고용복지센터에서 정식 개소식을 연 직후 합동간담회를 열고 협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신제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등 협업부처 장·차관과 5개 고용복지센터 현장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협업부처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과정 개선 ▶협업을 이끌어내는 평가체계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방법 등이 논의됐다. 또 각 센터 실무자들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점을 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업부처들은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소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마련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G** 글·이창균 기자

“고용복지센터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상담 통해 맞춤 프로그램 소개·구직활동도 도와

경기 남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배승렬 팀장은 요즘 일하는 데서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 그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노력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연은 이렇다. 사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는데도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센터를 찾았다.

“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2주간 입원하시고는 곧바로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언니는 직장을 잃은 지 1년이 넘도록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배 팀장은 담당자로서 고민 끝에 A씨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를 회수했다. 하지만 딱한 처지의 A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배 팀장은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A씨에게 권유하고 상담받도록 했다. 이어 복지지원팀으로 함께 찾아가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어떤 것이 있을지 상담하도록 조치했다. 잠시 후 찾아온 A씨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배 팀장은 “고용복지센터에 모인 기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면 A씨에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새로운 희망을 얻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복지센터가 이처럼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라나고 있다. 박현정(42·가명) 씨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박 씨는 올해 5월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담당자가 복지지원팀에 박 씨의 문제 해결을 의뢰했고, 상담 결과 박 씨는 생계비와 자녀교육비는 물론이고 가족상담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취업활동에 집중해 취업에 성공했다.

차진영(43·가명) 씨 역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서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다. 차 씨는 결혼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뒀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다시 사무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수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던 탓에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차 씨는 남양주고용복지센터에 다양한 취업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차 씨를 안내했고, 차 씨는 이곳의 ‘새일팡팡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 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 차 씨는 이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남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 재취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서 무럭무럭 자라는 기업가정신

전국 33개 대학서 기술자회사 통해 청년창업가 양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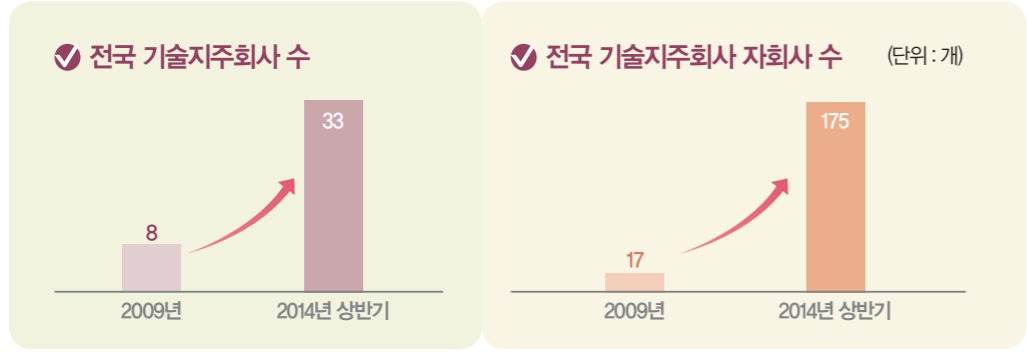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의 인큐베이팅센터.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술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다. 대학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자본금 90여 억원, 교내 인재들의 기

술과 아이디어,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8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산학연 협력기능 활성화에 나섰다.

이후 소기의 성과가 이어졌다.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KU디지탈미디어랩·오라픽스·퀀텀바이오솔루션즈 등 이 학교 기술지주회사 4개 자회사는 2012년 서울시의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사업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



자료: 한국연구재단

원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대외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 지금은 모두 12개 자회사가 활발한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긴밀한 협업 아래 전국 주요 대학들의 산학연 협력기능 강화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송승용 실장은 “기술지주회사 특성상 자회사들이 초기 창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산업부에서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맡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 각 부처가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우리 대학도 창조경제 구축의 바람직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대학,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

미래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전국의 주요 대학 인재들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를 각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갖춘 대학교는 고려대만이 아니다.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 이희경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대학교 등 전국 33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고 누적 자회사 수는 175개에 이른다”며 “2009년 무렵부터 산학연 협력기능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각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대학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당장보다는 수년 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창업

가 양성 등에 탄력을 받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은 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술지주회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들을 업종별로 보면 첨단제조 32.4퍼센트, 일반제조 28.1퍼센트,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18.7퍼센트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의 일반 벤처기업보다 첨단제조 분야 비중이 컸으며, 에너지·의료·정밀 등 미래 제조업을 이끌 분야에서 28퍼센트로 일반 벤처기업(6.9퍼센트)의 4배를 기록했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들의 매출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 53개 자회사의 전체 매출은 321억원으로 전년보다 369퍼센트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연평균 14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 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118개 자회사에서 785명을 고용했다. 우수한 청년창업가 양성 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송승용 실장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외에도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며 “모태펀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해 자회사들이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하고, 대학으로서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G** 글·이창균 기자

“산학연 협력으로 사업 날개 달았죠”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 “네트워크 구축이 최대 장점”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에스트리니타' 등의 커피 볶는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커피 생두를 볶아 원두를 만드는 기계를 주로 만드는 벤처기업이다. 특히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쉽게 커피 생두를 볶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스마트 로스터(Smart Roaster)기능을 선보여 수년 전부터 관련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의 커피 볶는 기계가 이것저것 사람 손을 많이 필요로 했다면, 이 회사 제품은 '자동 모드' 등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사용자 하여금 더 쉽고 편리하게 고품질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돕는다. 시중의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같은 곳에 납품도 많이 했다.

그동안 로스팅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고가의 기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량의 원두를 미리 구입해 써야 했던 가게들은 이 회사 제품을 통해 보다 신선한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우종욱(33)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는 20대였던 2010년 5월 회사를 창업했다.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2012년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기(轉機)를 맞게 된다.

“원래 모교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몰랐는데 사업하다가 알게 됐죠. 다들 사업 초기에는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부터 쉽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창업할 공간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제 경우는 기술지주회사의 인큐베이팅센터를 활용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아주 저렴한 임대비만으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 자금을 받는 데도 유리해지고요.”

우 대표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강점을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다른 벤처기업들은 쉽사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 비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끼리는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거든요. 마케팅 측면에서도 하나로 뭉쳤을 때 더 큰 힘이 발휘되곤 했습니다.”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의 현재 월매출은 1억~1억5천만원 정도다. 우 대표는 올 연말이 되면 월매출이 3억원 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캠퍼스 밖 기숙사’… 발상 바뀌길 열다

국공유지 적극 활용… 2017년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25퍼센트 달성 기대



올해 9월 개관한 서울 홍제동의 행복(연합)기숙사.

우골(牛骨塔). 우골은 학비 마련을 위해 부모가 내다판 ‘소 뼈’를 일컫는 것으로, 1960~70년대 부모가 낸 자식의 교육비를 재원으로 높은 건물을 세운 대학을 비꼬는 말로 쓰였다. 그만큼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부담이 컸다는 방증이다. 세월이 지났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온 대학생들에게는 비싼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경 대학생들의 28.1퍼센트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월 34만원 수준의 기숙사나 보증금 500만~1천만원에 임대료 40만~50만원 수준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주거비용만 한 달 생활

비의 30~40퍼센트를 차지한다. 주거불안이 지방 출신 대학생의 생활고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집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대학생 주거지원은 크게 두 가지 틀로 진행된다. 임대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것과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의 일부로 연 3천호를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고, 최대 연 10개의 공공기숙사와 2개의 연합기숙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경우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은 2017년 40만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대학생 주거복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는 부처와 기관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기획재정부·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은 지난해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기숙사를 늘려 2017년까지 연간 1만6천여 명을 지원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25퍼센트를 달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설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함께 산하 LH공사를 통한 행복주택사업 시행을 맡았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설지원을 주도하고 기재부는 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를 제공했다.

사립대 공공기숙사·연합기숙사 등 전방위 지원

부처 간 협업이 진행되면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인 수용인원 목표 1만5,396명을 넘어 1만7,062명으로 약 110퍼센트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목표 3천호의 90퍼센트인 2,700호를 지원했다. 또한 사립대 공공기숙사 용자지원을 확대해 월 기숙사비 3만4천원 인 하효과를 냈다. 이를 통한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평균 기숙사비는 24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9월에는 홍제동 국·공유지에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밖에 설립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첫 공동 기숙사로, 교육부·서대문구·국토부·사학진흥재단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업을 통해 설립·준공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서대문구가 각각 국유지 3,418평방미터와 공유지 82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84억1,400만원,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 74억5,800만원을 투자했다.

홍제동 행복기숙사에는 현재 서울 서북부권 3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 516명이 입주해 있다.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19만원이다.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34만원)에 비해 4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이밖에도 올해 3월부터 서울·파주·천안

2014년 개관한 행복(공공·연합)기숙사

구분	학교	수용인원	사진
공공기숙사	단국대(천안캠퍼스)	928명	
공공기숙사	대구한의대	402명	
공공기숙사	경희대(서울 이문동)	73명	
공공기숙사	경희대(회기동)	51명	
공공기숙사	충북보건과학대	230명	
공공기숙사	서영대(파주캠퍼스)	102명	
연합기숙사	서울 홍제동 행복기숙사	516명	

자료: 국토교통부

등지에 6개 공공기숙사가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기숙사의 총 수용인원은 2천여 명에 이른다. 기숙사비도 일반 사립대 민자기숙사보다 싸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전수문 사무관은 “다양한 기숙사 건립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기숙사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기금과 국유지 활용이 필요했다”며 “부처 간 협업이 필연적이었는데 다행히 협조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G** 글·함승민 기자

“방세 준 만큼 알바 줄이고 공부해야죠”

서울 홍제동 연합기숙사 입주 대학생 “고시원 반값에 입주했어요”

서울 4년제 대학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명희(26·가명) 씨는 2008년 대구에서 상경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다. 행정 고시를 치러 공무원이 될 요량으로 재수를 해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그의 대학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문제는 생활비 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큰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방세가 의외의 복병이었다. 기숙사는 경쟁률이 워낙 높아 입사가 쉽지 않았다. 원룸 월세를 들어가자니 보증금으로 낼 목돈 마련마저 쉽지 않았다. 보증금이 필요 없는 학교 앞 고시원은 가장 저렴한 곳도 월 40만원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상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께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고 방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스펙의 대학생들이 자리를 다 꿰차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김 씨는 커피숍·편의점·식당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주말과 주중에 틈틈이 일하다 보면 몸은 언제나 천근만근이었다. 이렇게 번돈이 한 달에 90만원. 그러나 방세와 고시 공부를 위한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내부 전경.

알바에 공부에 지쳐가던 중 새로운 꿈 충전

돈을 더 벌기 위해 김 씨는 수입이 괜찮은 일이 있으면 수업도 제치고 달려나갔다. 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시험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학점이 떨어졌다. 결국 3학년 들어서는 장학금을 놓쳤다. 등록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야만 했다. 다니던 고시학원도 그만뒀다. 악순환이었다. 김 씨의 꿈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친구의 귀뜸으로 정부가 서울 홍제동에 연합기숙사를 새로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숙사 모집공고를 찾아봤다. 기숙사비는 2인 1실 19만원, 4인 1실 18만원이다. 전에 살던 고시원의 반값이다.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였지만, 기숙사비를 감안하면 그리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하철 역도 가까워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을 오고가기도 편했다. 지원 자격도 까다롭지 않았다. 지방 출신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입학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 씨는 바로 지원했다. 물론 경쟁률이 높았지만 운 좋게 당첨됐다. 입사해 보니 신축 기숙사여서 시설도 깨끗하고 편리했다. 세미나실·스터디룸 등 편의시설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류도 할 수 있다.

김 씨는 “방세를 줄인 만큼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그 시간에 학과 공부와 고시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싸고 좋은 시설의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버스요금 내고 마을까지 들어오는 택시 타요! 경북 의성군 업리에서 행복택시를 타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마을 어르신들, 행복택시 왔어요!

경북 의성군 등 전국 교통소외 마을에 버스요금으로 택시 운행... 춘천선 버스형 선택

‘마을’ 하면 떠오르는 고장이 경북 의성이다. 의성군 의성을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정연숙(63·업리) 씨는 남편 배규화(66) 씨와 함께 시어머니(84)를 모시고 산다. 자식들은 장성해 집을 떠나고 부부에게는 차가 없다 보니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병원에 다녀오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한참인데, 시어머니가 걷기 힘들어하시니 하는 수 없이 택시를 불러요.” 읍내까지 택시요금에 왕복 2만원, 한푼이 아쉬운 농가에서 적지 않은 돈이다. 그리고 고령에 병원이 어디 한번 가고 말 곳인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 씨가 사는 마을에 농촌버스요금(왕복 2,4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들어와 한시름 덜

었다. 의성군이 지난 8월부터 농어촌버스 승강장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군내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한 달에 6~8회 버스요금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부터다.

정 씨는 마을로 들어오는 행복택시를 보고 활짝 웃었다. “약속된 시간에 마을 안까지 택시가 들어오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다니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업리경로회관 앞에 차를 댄 택시 전면에 ‘행복택시 참여차량’이란 배너가 눈길을 끈다. 택시기사 임창호(63) 씨는 이 마을 주민이기도 하다. “말이 의성읍내지, 우리 동네같이 교통이 불편한 곳도 많지 않아요. 제겐 약간의 고정 수입이 생기고, 마을 어르신들



업리 버스승강장. 안쪽 마을을 가려면 이곳에서 내려 1.4킬로미터를 더 걸어야 한다.

이 좋아하시니 제 기분도 좋지요.”

의성군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사업 발굴모델 공모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성군 사정에 적합한 '택시형 모델'로 신청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5만6천명의 군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34.3퍼센트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이며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장애인 등이 많아 농어촌버스가 다녀도 탑승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택시모델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너무 적거나 승강장에서부터 1킬로미터 이상 거리인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송 수요가 집중되는 장날 등에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모델을 공모사업에 접수했다.

운행 시기·구간 등 모든 사항 주민 자치로 결정

농식품부는 버스가 사실상 농촌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인구 감소로 버스마저 끊기는 마을이 늘어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민이 협력하는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 13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9월 말 현재 의성군 등 4곳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을 운영 중이다.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의성군을 비롯해 춘천(버스형), 부안(택시형), 무안(택시형) 등에 2014년부터 2년간 차량유지보수, 운행 손실보상,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농식품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는 관련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고(올

1월) 지자체는 조례 제정,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다. 운행시기·구간 등 버스 혹은 택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맡는다.

지난 8,9월 두 달간 행복택시 이용자는 약 3천명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고 읍내까지 나오는 데 택시요금 부담이 큰 마을일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다. 의성읍내까지 왕복 택시비가 4만8천원가량 나오는 안사면 월소리의 행복택시 담당 주민 유병하(56) 씨는 “읍내까지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동네이다 보니 택시 타려는 분들이 정원(4명)을 넘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사정이 더 급한 사람에게 양보해 가며 순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씨는 “연말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올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복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버스 정류장과 마을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측정했다. 마을마다 돌며 거리 측정을 했다는 경제지원과의 박래건 씨는 “처음 행복택시를 운영할 때는 버스요금이면 되니 택시 타고 읍내 나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실제로는 택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할매들에게는 2,400원도 큰돈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관련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확산, 농촌 공동시설을 활용한 보건·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에너지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어르신들 편해지니 더 바랄 게 없네요”

의성군 업리 배인규 이장 “행복택시 없을 땐 내 차로 읍내 병원 모시곤 했어요”



“1979년 업동역이 처음 만들어지고 통학열차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업동역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안동역으로 가는 통학열차가 아침저녁으로 샐지요.”

중앙선의 간이역 업동역 바로 아래 마을인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의 배인규(62) 이장은 “그것이 업리에 들어온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매월 7차례 행복택시가 운행되며 마을 앞 국도에서 1.4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업리경로회관 앞으로 행복택시가 들어와 마을주민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은 중앙선의 열차들이 비켜가는 신호장으로 사용되어 간이역의 낭만을 찾는 여행자들이 간간히 찾는 업동역은 업리경로회관과 약 500미터 거리에 있다.

업리는 의성읍 북쪽으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읍내’ 마을이지만, 정작 안쪽 마을은 국도변의 업리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다. 업리 주민 95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44명(46.3퍼센트)으로 전체 의성군의 고령화율(34.3퍼센트)보다 높다. 배 이장은 행복택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차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읍내 병원에 태워다 드리곤 했다고 한다. 배 이장은 현재 의성군청에서 매월 7회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영 날짜를 의성장날이 열리는 2,7일에 맞춰 6회, 나머지 1회는 매월 10일로 정했다.

“어르신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할 때는 병원 가는 일이 가장 많아요. 이왕 병원 가는 길에 장도 볼 수 있도록 장날을 택한 거지요. 그리고 매월 10일은 그날쯤이면 할 일이 어느 정도 모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택시가 오전 8시 업리경로회관 앞에 오면 주민들은 기본요금만 내고 택시를 타고 나간다. ‘짧은’ 택시 기사가 내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등 장비를 접어서 택시 뒷좌석에 싣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택시 타고 나가시는 분들과 택시기사님이 시간을 맞춰서 정해서 각자 일을 보다 적당한 시간에 들어오지요.” 관철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수고를 덜게 해 준 행복택시는 주민들이 함께 택시를 타고 오가며 대화가 늘어나게 하는 즐거운 변화도 가져왔다고 한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화가 잘 되나요? 그래도 같이 택시 타게 되니 어디 간다, 왜 가느냐 말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주민들 간에 말을 나눌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행복택시 타려는 사람이 4명을 넘어서는 일도 있으나 그럴 때에는 좀 더 사정이 급한 사람에게 양보하며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더 바라는 거요?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젠 편하게 옮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해 교체하는 불편 없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으면서 지원카드와 포털 통합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고 싶은 시설은 대기순번이 길어요. (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평가 시 안전이나 교사의 질도 함께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별 특성이 있는데 똑같은 잣대를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안 맞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두고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2013년 영유아를 둔 부모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학부모와 보육원·유치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의 요구가 큰 교육·보육과정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우선 추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에서 가깝고 비용부담은 적고 양질의 교사와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돌봄시설의 필수요소다. 시설이 안전한지 깨끗한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선택이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 사이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용, 시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에서 각각 정보를 제공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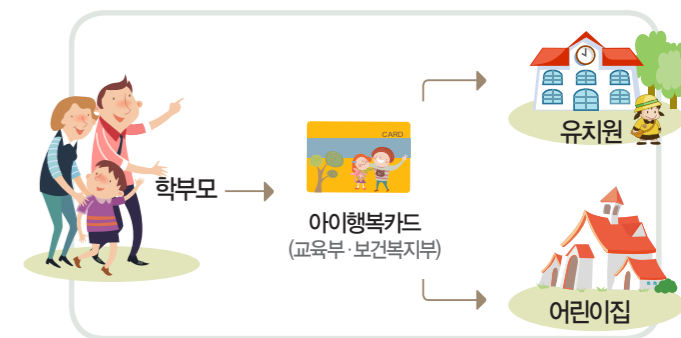
결제수단도 불편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지정된 은행으로 가야 한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일일이 가입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변경(2만4천명)하거나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옮긴 사람(24만3천명)은 총 26만7천명이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리부처를 통합해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유롭게

현행 2014년



개선 2015년



자료: 국무조정실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단계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이다. 현재 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보육료 결제), 교육부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비 결제)로 이원화된 결제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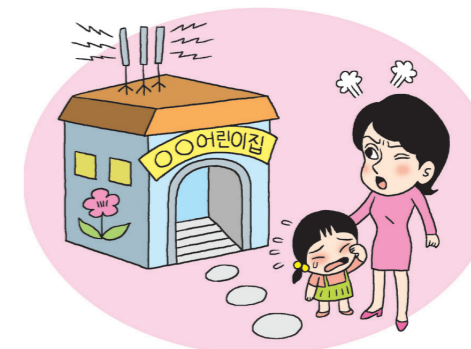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도 통합

0~2세 아이도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지며 반일제·시간제 등의 보육지원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간을 이동할 때 새로운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발급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동하는 영유아 26만7천명의 카드 발급금액 13억3,500만원 정도가 절약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 사이트도 올해 말부터 하나의 포털로 통합한다. 학부모가 거리, 영유아·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 통학차량 등 11개 핵심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원비, 프로그램 및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한 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평가, 어린이집 평가 확대로 시설 간 서비스의 질 격차가 축소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한다. 원비·교사·평가 등 학부모의 선택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핵심정보 공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 글·박지현 기자



“아이에겐 시설 좋은 곳이 가장 좋죠”

경기 원당에 사는 양은성(38) 씨. 딸(6세)의 유치원을 옮겨야 하는 그는 “비용이나 시설 등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울상을 지었다.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는 양 씨에게 돌봄시설 선택은 항상 중요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 유치원을 생각지도 못한 안전문제로 떠나야 했다. 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휴대폰 중계기 때문이었다. 휴대폰 중계기는 전자파가 강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시설이다. 아이들이 자주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했지만 부모들은 이유를 전혀 모르다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허둥지둥 시설도 철거됐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

양 씨는 집과 가까우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다른 돌봄시설을 찾기 위해 또 고민해야 했다. 그는 “정보(사이트)도 분리돼 있고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려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원카드 통합에 반기운 기색이다. “하루빨리 시행돼서 딸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상가 임대계약 5년 내 갱신요구권 생긴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새로 제정...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

상가를 임차해 2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던 정모(50·여) 씨는 화병이 생길 지경이다. 임차기간이 완료된 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옷가게를 정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정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쳤다. 정 씨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보들을 규정했다더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규

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영세소상공인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호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등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며, 개정안은 법무부가 수립·시행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향연 검사는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향후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국 외국인근로자에 미청구 보험금 찾아줘

국내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 2년 전 귀국한 베트남인 A 씨. A씨는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에게서 “한국에서 근무한 동안 사업주가 적절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성격)을 찾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A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보험금을 찾아주는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말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출국만기보험이 1만3,687건(136억원), 귀국비용보험은 3만9,437건(16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사·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외국인력지원센터·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미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락처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선재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최경호 기자

권리금 산정기준 어떻게?

권리금 배상액 산정기준은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현황,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리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품 팔지 않아도 창업이 가능하네요”

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 상권정보시스템 DB 공유

지난해 4월 수원에서 치킨집을 개업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박모(50) 씨. 박 씨는 개략적인 정보는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임대시세나 건축물 정보를 얻기 위해 부동산 여러 곳을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미용실을 개업하려던 이모(45·여) 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컨설팅을 받았다. 이 씨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인근 지역의 임대시세 전반과 출점 대상 건물정보, 입지 특성까지 한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씨가 박 씨보다 훨씬 편하게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의 ‘협업’ 덕분이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건축물 자료, 임대시세 등을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기반 서민지원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상공인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했다. 두 부처의 협업 덕에 창업 희망자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sg.smba.go.kr)’에 접속한 뒤 ‘지역별 상권분석’ 코너에 들어가면 창업과 관련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1357**

제대군인 취업상담 쉽고 빨라졌다

자격증 등 인사자료 공유로 전화상담은 물론 구인 요청에 신속한 추천 가능



한 제대군인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센터에서 다시 구직카드를 쓰지 않아도 간단한 취업상담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육군 소령 전역 이모 씨·41·서울 구로구)

“예전에는 상담하러 온 제대군인들이 작성한 구직카드 내용이 나 군 경력에 의존해 상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사정보를 전산에서 조회할 수 있어 간단한 취업상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김영수 상담사)

“서울지방보훈청으로 등록회원 정보를 한데 모아 검증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센터에서 바로 조회해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최병남 취업상담팀장)

10월 7일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들은 말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지난 5월 20일부터 인사정보시스템을 공유한 이후 나타난 반응들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국방부 제대군인 인사자료 열람이 가능하기 전에는 군 경력이나 교육 이수정

보 등을 조회할 수 없어 신속한 취업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전역 전부터 후까지 연속적인 취업지원은 물론 구직 관련 절차도 단순해지고 있다. 절차가 단순해지는 만큼 효율적인 취업지원 역시 가능해졌다.

제대군인 인사정보 공유가 있기 전 제대군인들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직접 구직서류를 작성한 뒤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지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제대군인의 기초적인 인사정보 부족으로 구체적인 취업상담에 나서기도 쉽지 않았다. 지원센터 박용하 상담사는 “예전엔 상담 받으러 오는 제대군인의 기초적인 인사자료 파악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인적사항은 물론 군별, 복무기간 같은 기본적인 사항까지 정리해야 하므로 취업상담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전역 전 작성한 '마스터 이력서' 공유도 추진

재취업 상담을 받을 자격요건(5년 이상 중장기 군복무)이 안 되는 대상자가 취업상담을 받은 일도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손쉽게 제대군인의 군 인사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방문 군인이 직접 작성한 구직카드에만 의존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정기적으로 등록회원 검증에 나선다. 등록회원 자료를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지방보훈청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업무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가량이 걸린다. 현재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1인당 1,600명 정도의 제대군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취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영승 홍보팀장은 “직접 찾아와 인적사항과 구직정보까지 작성한 150명 정도만이 취업상담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인사정보를 조회하면서 취업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 센터 상담사들은 전화만으로 간단한 취업상담은 물론 원할 경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안내도 가능하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전화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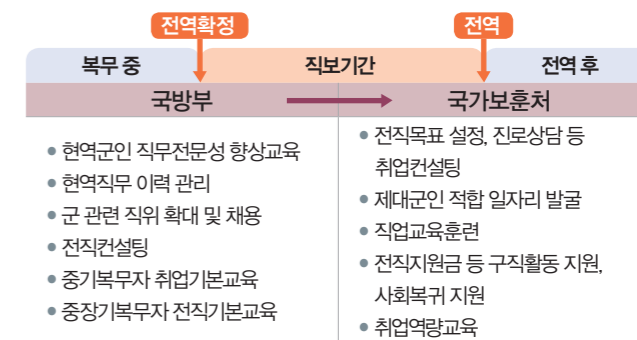
국방부와 보훈처가 공유하는 정보는 군별·군번·계급·병과·직책·복무기간 등 총 10가지 기본 사항과 전역 전 이수 교육·보유 자격증·외국어 능력 등 3가지가 그 대상이다. 두 부처는 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를 전역 전 작성한 구인·구직카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제대군인의 취업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담고 있는 일명 '마스터 이력서'가 그 대상이다. 이 정보까지 공유하게 되면 '맞춤형 취업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전화번호·학력·학위 등은 당분간 공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시스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그 이후엔 취업 실적까지 연계해 체계적인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구인 관련 기업은 8,6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지원센터에 구인 요청을 한 실적이 있다. 유 홍보팀장은 “지원센터에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며 “적합한 인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보지만 보관된 인적정보가 부족해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앞으로 '마스터 이력서'라 불리는 구인·구직카드 정보까지 공유하게 되면 센터가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신경희 사무관은 “국방부와의 인사정보 공유는 현재 이뤄진 상태이고, 간혹 발생하는 오류 수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보다 향상된 제대군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김영문 기자

정부부처 협업으로 개선된 제대군인 지원체계



자료: 국가보훈처



“바로바로 취업상담되니 마음놓여요”

구직카드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 없어져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42) 소령은 15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에 전역했다. 군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그는 모아놓은 돈으로는 어린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버거워 이른 시일 내에 취업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밤잠을 설쳤다.

공병 특기자였던 김 씨는 “군복무 중 건축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건설 관련 기업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았다. 제대 후 석 달 동안의 취업 노력이 진전이 없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전역 전 국방부취업센터에서 작성했던 구직카드와 군 인사기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취업상담에 돌입했다. 상담사는 김 씨의 군 특기와 자격증 등을 확인하고 몇 군데 건설업체를 추천해 줬다. 그와 함께 중장비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소개받았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중장비기사 자격증 취득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전역 후 취업을 원할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들러 재차 구직카드와 각종 인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역시절 정보들을 바탕으로 취업상담이 빠르게 진행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학 강단에 서리라”... 도전 끝에 얻은 행복

최우수상 박정우 순천대 겸임교수, 34년 군생활 마치고 박사과정 거쳐 평생 꿈 이뤄



박정우 순천대 겸임교수가 현역시절 단상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2009년 12월 31일 전역신고를 마치고 부대 정문을 나오는데, 저의 두 눈에서 솟는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3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군복만을 입고 살아오다 별다른 생각 없이 민간복장으로 환복(換服)을 하러니 웬지 가슴이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전역 후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포기하지 않은 꿈에 도전하기 위해 저는 우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는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반대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오히려 저의 용기와 도전정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백두산 부대에서 16년 동안 대대 탄약관리관, 연대병기관, 사단 군수처 탄약관리관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정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끄집어내어 한 가지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영어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문법을 숙지하고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들이 무척 힘

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는 실력에 제 자신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나중에 석사 및 박사과정 중 영어시험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행정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던 저는 50대 중반에 가족들의 지원으로 박사학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언제부터인가 대학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강의를 하고 싶은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군문에 들어섰고 장기복무를 한 시점부터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성원 속에 내민 박사학위 도전장

2000년 12월 정들었던 백두산 부대를 떠나 이곳 순천으로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편입을 했고, 석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학도(晩學道)로서 학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긍지와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재취업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족회의를 통해 아름답게 도전하는 박사과정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벽차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복을 입고 지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하고 파란만장(波瀾萬丈)한 일들을 큰 과오 없이 극복하고 견디어 왔는데 더 이상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자문자답(自問自答)을 하면서 저의 능력을 제 자신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굳은 마음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4일 박사과정 입학 후 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주어진 학점을 이수하라 논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나의 길은 오로지 이 길 뿐이다”라는 신념(信念) 하나로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하루에 두 세 시간 잠을 자면서도 피곤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과정 수료 후 지도교수님의 열성적인 지도로 본격적인 논문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논문 제목과 부합된 각종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좋은 논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학계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뵙고 고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인터뷰와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 동안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만학도로서 다른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였는지 몰라도 운이 좋게도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게 되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칙개정으로 시행된 성적우수자 조기수료 제도로 5학기 만에 수료를 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학(修學)을 한 선·후배 및 동기생의 양보와 배려에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종 논문심사 통과한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듯

2013년 5월 23일 저에게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했을 때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

은 심정이었지만 용기를 북돋아준 가족들과 지인들의 위로와 격려로 버티고 또 버틴 결과, 최종 논문심사에 통과한 날이기에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아웃소싱 정착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저에게는 제2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슴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대학교수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아름다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지원하게 된 국립 순천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임용이 되어 꿈에 그리던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및 각종 행정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庭園)의 도시 순천에서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3위 입상자인 순천 출신 남승룡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남승룡 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에서 군생활의 조직관리 경험을 살려 운영지원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남지역 컨설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끝나지 않은 꿈,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구호가 저의 가슴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깊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꿈을 설계한 후 아름답게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다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곁에 항상 머물기를 기원(祈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박정우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전 육군 3사단 준위)



“국민행복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핵심”

김태진 한국교통대 교수 “협업 성과 나타나면 인센티브로 부처 독려 필요”

“콜라, 사이다, 오렌지주스, 커피 등을 제공하는 자판기 서비스들을 예로 들어 보지요, 고객들이 사이다를 자주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는 사이다의 공급을 늘렸는데 사실은 자판기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아 사이다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10월 7일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만난 김태진 행정학과 교수에게 왜 지금 부처 간 협업이 화두인가를 물었다. 김 교수는 정작 국민이 원하는 ‘물이 없는 자판기’를 예로 들며 “정부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민간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적당히 식은 루이보스차를 내놓았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한 문답은 목 넘김이 부드러운 루이보스차와 같이 부드럽고 쉬웠다.

전에도 협업행정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협업은 영어 단어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업무를 함께한다는 코워크(cowork)의 개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담론의 과정 속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정부부처에서는 부처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지금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별, 부서별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직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경직된 조직은 수평적으로도 경직되어 교류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지요. 반면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단일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현장 중심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선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업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협업은 자발성이 중요하지만 집단행동의 딜레마, 협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 인간 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의 등장(wicked problem)으로 인해 정부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협업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 효율성의 원칙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개선, 비용절감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개선의 효과가 발생했는가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향성의 원칙입니다. 협업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간의 부처 간 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부처가 협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업무 효율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협업에 대한 강조, 국무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에서 협업에 대한 점검 등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부처 간 협업 대표 사례를 꼽아주신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준 사례는 매우 많은데, 먼

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협업을 통해 산림 방재와 농산물 방재를 함께 실시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적조를 예방하고 제거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지요.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8,695명의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이 향후 어떤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 협업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부처 간 협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 등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협업이 가진 특성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협업으로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에서는 부처 간 협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보공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 선진국이다 보니 우리와 같이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찾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상명하달식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온 반면 서구에서는 수직적 시스템과 함께 위원회 등의 형태로 수평적 조직이 있어 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협업의 성과가 나타났을 때 주관부처와 참여부처 모두에 인센티브를 주어 협업을 독려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은 이론적·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박경아 기자



김태진 교수는 부처 간 협업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성과를 내는 협업부처 모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